第26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임 시 회 의 록)

第1號

國 會 事 務 處

2007年2月5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1. 국정에 관한 보고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3. 국회운영위원장(김한길) 사임의 건
4.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附議된案件

o 의원(신명) 선서 및 인사 ····· 1
o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인사 ····· 2
o 국무위원(산업자원 김영주) 인사 ····· 2
1. 국정에 관한 보고 ····· 3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 제출) ····· 8
o 의사진행의 건 ····· 9

(10시20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o 의원(신명) 선서 및 인사

(10시2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2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신명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명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2월 5일

국회의원 신명

○의장 임채정 의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신명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명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감격하고 설레입니다. 한 30여 년 동안 정부 측 뒷자리에서 의원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꿈이 이루어져 국민 앞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계속될 수 있는 세상, 그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된 다음에도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인류의 모든 성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이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원한 구호보다는 작고 여린 것에 먼저 연민의 눈길을 보내고 다가가 손을 잡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 닦은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신명나는 정치를 펴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o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인사

(10시26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지난 1월 22일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과정에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많은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될 것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명제를 더욱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지킬 것이며 헌법만을 바라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헌법수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

o 국무위원(산업자원 김영주) 인사

(10시30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김영주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과 개도국의 추격 그리고 고용의 둔화 등 어려운 도전이 많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에너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1일부터 8일간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참석을 겸해 러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하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5차 APPF 회의에서는 정치안보 세션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요청하였고 6자회담 참가국, 특히 당사국 간의 협력과 양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안과 대표단의 노력의 성과로 APPF 총회 마지막 날 '북한 핵실험과 관련 동북아시아 평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APPF 기간 동안 중국 및 일본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한·중·일 3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3국 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중국과 일본 대표단으로부터 전적인 공감과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미로노프 러시아 상원의장과 그리즐로프 하원의장을 만나서는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한·러 양국 의회 간의 협력 강화 및 에너지 자원, 우주항공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베네시아 하원의장과 카스트로 부통령 및 드릴랜 전 상원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회 지도자를 만나 양국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필리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한진중공업에서 추진 중인 수빅항 조선소 건설공사, 한국전력의 나가발전소 설립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리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설명과 각국의 지지 확보, 방문국 및 한·중·일 3국 의회 간의 교류·협력 강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국제박람회 유치를 비롯한 각종 외교 현안 지원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익의 증진을 위한 외교 역량의 강화와 외교 성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국정에 관한 보고

(10시3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명숙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의 첫 국회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 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양극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0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출은 세계 IT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서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등 체감경기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던 부동산 가격도 최근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출산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개혁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특권과 유착구조를 해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동반 성장, 정부 혁신, 인재 양성 등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전한 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리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에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후유증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원칙을 지키며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 항만 노무 공급체계 개편 등 해묵은 사회갈등 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현안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추진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력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혁신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방송 등 유망업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최근에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 개씩 총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는 물론 봄철 전·월세 대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고, 1월 31일에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등 관련 대책들이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에 계획된 공기업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신규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근래에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급증, 사금융 피해,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경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대출자에 대해서는 1건에 한하여 만기를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덕 사채업자에 의한 고리사채와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보다 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적인 사금융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행성 게임은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지금은 사행성 게임장의 86%, 사행성 PC방의 98%가 휴·폐업하는 등 점차 근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이 확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으로 사행성 게임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여 건의 집회·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데 약 5000억 원이 소요되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집회·시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론의 장을 정부도 많이 만들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노사분규가 감소하는 등 산업 현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에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협력 확산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 아래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해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는 2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초기 단계의 조치 등에 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미 베를린 회동과 남북 베이징 접촉 등을 통해 차기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과 평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조를 유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굳건한 한미동행하에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을 도출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방송·통신 융합, 교육 혁신, 정부 혁신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의 효과가 금융 교육 의료 상거래 등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통신산업은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은 승자가 독식하는 분야입니다. 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세계 경쟁 무대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쟁국들이 방송·통신 융합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위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 호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도 이미 수년 전부터 통합기구를 운영하는 등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발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방송·통신의 조직과 기능을 단일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송·통신 융합 기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득계층별 지역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 지역에 대해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 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교육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 내실화, 학교 내의 논술교육 강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 통폐합, 국립대 법인화 등을 통해 대학 구조를 개혁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률·의료·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는 사람과 경험에서 시스템과 지식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정부 혁신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온-나라(On-nara) 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업무 처리 방식을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정부 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밝고 튼튼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가 될 비전 2030, 한미 FTA,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보다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 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 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입니다.

정부는 올 1월까지 여섯 차례의 협상을 통해 통합협정문 작성, 상품양허안의 즉시철폐율 80% 이상 달성,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과 무역구제, 자동차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종 타결을 향해 지금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우리 산업의 특수성과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동시에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쌀은 개방품목에서 제외하고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어서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은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수도권의 각 지역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 속에 도시 이름을 '세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청사 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세종'은 21세기 첨단과학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제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10개 중 8개 도시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주와 부산의 경우도 올 상반기에는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대구·울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업도시는 6개 사업 중 태안이 지난해 말 가장 먼저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무안 충주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마쳤으며, 무주 영암 해남은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서남권등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지난 1월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서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 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12월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하여 여덟 차례의 재·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 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는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기 바라며, 정치권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셔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말에 국방 개혁법, 비정규직 보호 관련 3법, 노사 관계 선진화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정부가 제출한 주요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할 많은 법안들이 아직까지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논의가 집약된 사법개혁법안은 사법제도를 민주화시키고 선진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입법과제입니다.

사법개혁법안은 국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것으로서 별다른 정치적 쟁점도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너무나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입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 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과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음 정부에게 탄탄한 국정 운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한명숙 총리, 고생하셨습니다.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 제출)

(11시04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충남 서산·태안 출신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07년 2월 6일, 7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07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07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2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어요?

(○손봉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손봉숙 의원의 이의를 포함해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오늘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단상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김형오 원내대표, 의장과 의논 후 하단)

---

o 의사진행의 건

(11시13분)

○의장 임채정 지금 의사일정 3항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의원 두 번씩이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1월 31일 있었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님과 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아마 1월 31일~2월 1일 회담을 갖고 2월 5일, 오늘부터 임시회를 열기로 이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 1일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본 의원과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 간에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서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65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그리고 '2월 5일 국정에 관한 연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들어 보이며)

양당 간의 합의문서에 이렇게 문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오늘 태도를 바꾸어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국회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를 존중할 줄 알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건으로 합의해 놓은 사항까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헌신짝 팽개치듯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 도의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원내대표단을 새로 구성해서 2월 국회부터 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것은 더더욱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상 내세우는 이유로는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의원들 탈당 사태도 있고, 또 2월 14일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후에도 그런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위원장 선거에 반영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타 당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또한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의 하나 우리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원내 제1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열린우리당은 엄연한 집권여당입니다. 과거에 봐도 집권 여당의 의석 수가 1당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은 전례가 많습니다.

15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을 한 사례를 보면, 1998년의 일입니다마는 당시 한나라당의 의석이 151석이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의석이 88석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양당의 의석 수 차이가 63석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맡은 전례가 있습니다.

16대 때인 2000년도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의석이 133석이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의 의석이 115석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8석의 의석 수가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더불어서 국정의 운영을 책임지는 양 기관입니다. 집권당이 다소 의석이 많든 적든 간에,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 운영을 책임짐으로 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운영위원장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회의장께서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한나라당의 원내 부대표 김충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의원님의 연설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2월 1일 합의사항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이 합의사항은 물론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합의사항에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연설은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대독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의 합의하고는 정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합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언론에서 여러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거나 또 우리가 전망하기는 계속 열린우리당의 의원들 일부가 지금 탈당을 하고 있고, 또 14일에 전당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내 새로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지금까지의 여대야소의 구도가 야대여소의 구도로 원내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큰 변동이 있는 가운데 일부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야당으로서는 여당이 그러한 의견을 내서 두 원내대표단에서 그것을 합의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정략적 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원내 교섭단체가 새로 생기거나 또는 야대여소 구도가 되면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생깁니다. 국고보조금의 변동 문제라든지 정책연구위원, 국회 운영 예산 문제, 특위 위원장·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또 상임위원회 의석 배분 구성,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을 앞두고 오늘 선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아주 정중하게 드리는 것

이고, 또 이런 의견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도 소수당, 즉 소수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부 의원들이 나오셔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든 교섭단체가 지금의 여당과 서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지금 여당에서 운영위원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교섭단체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현 여당이 그 소수를 지지하면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정략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여당의 어려운 사정, 또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정을 조금 조정하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월 14일 이후에 여당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 국회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속상할 필요가 없고 서로 좀 시간을 가지고 잘 의논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말이 안 돼, 말이. 논리가 안 돼!」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채정 김충환 의원 인사하고 가세요.

(웃음)

양쪽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국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양당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양 교섭단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오늘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 의원(26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청가 의원(13인)

고경화 곽성문 권선택 김영춘
김태년 김희정 이목희 이상민
이원복 이은영 채수찬 채일병
한병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명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통일부장관	이재정
법무부장관	김성호
국방부장관	김장수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농림부장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환경부장관	이치범
노동부장관	이상수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조중표
기획예산처차관	정해방

○헌법재판소 참석자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태랑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정덕구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2007. 2. 1 의장허가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신명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2007. 2. 2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 용 희

2007년 1월 21일 국회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07. 1. 21)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

위원회	위원장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한길	열린우리당	2007. 2. 5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걸	법제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	열린우리당	2007. 1. 31
조성래	환경노동	법제사법		
신기남	과학기술정보통신	환경노동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최용규	문석호	열린우리당	2007. 2. 1
	노웅래	이기우		
	박기춘	김종률		
	최성	강기정		
	장경수	한병도		
	김교흥	유승희		
	오제세	서혜석		
	정성호	김재윤		
	최철국	강혜숙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장영달	2007. 1. 31

○교섭단체 가입

열린우리당

신명

(2007. 2. 2)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임종인	열린우리당	2007. 1. 22
이계안		2007. 1. 24
최재천		2007. 1. 26
천정배		2007. 1. 30
염동연		2007. 1. 31

○의안 제출

首都圈整備計劃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19 정부 제출)

1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 19 차명진·고흥길·권영세·김영선·나경원·남경필·박순자·박진·배일도·심재철·안명옥·우제창·유정복·윤건영·이경재·이계경·이군현·이규택·이윤성·이재오·이종구·이주호·임태희·정두언·정병국·정진섭·진영·한선교 의원 발의)

1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7. 1. 19 이영호·노웅래·이시종·한광원·신중식·조일현·김선미·강창일·김우남·김희선·윤원호·한병도·이상배·김기현·신학용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07. 1. 22 정부 제출)

1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2 김기현·황우여·이영호·박순자·이계경·김학원·진영·곽성문·이성권·김태환·김영숙 의원 발의)

1월 3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3 김춘진·최용규·김종률·배기선·김원웅·정세균·정청래·김성곤·김재윤·고조흥·윤호중·이경재·조성래·장영달·한광원·이시종·채수찬·박영선·김낙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3 김춘진·김종률·배기선·김원웅·정세균·정청래·김성곤·김재윤·고조흥·윤호중·이경재·조성래·장영달·한광원·이시종·채수찬·박영선·김낙순·최용규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3 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1. 23 강기정·김동철·강창일·양형일·임종인·김태년·노현송·엄호성·박명광·이기우·장향숙·홍미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3 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4 정두언·임태희·이인기·서재관·한선교·이군현·김정권·이재오·정갑윤·권경석·이계경·안경률 의원 발의)

1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7. 1. 24 박상돈·강길부·김낙성·김성곤·서재관·신학용·이종걸·장복심·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7. 1. 24 박상돈·강길부·김낙성·김성곤·서재관·신학용·이종걸·장복심·정장선·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7. 1. 24 이재웅·이명규·이계진·이상배·김병호·류근찬·이성권·정종복·김정권·박계동 의원 발의)

1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심재덕·강길부·채일병·강창일·박기춘·임종석·김명주·김진표·양형일·이인영·이시종 의원 발의)

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韓國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주승용·강봉균·강창일·김낙순·김애실·김현미·박기춘·박상돈·양형일·유선호·이인영·장경수·정봉주·정성호·최철국 의원 발의)

1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민병두·김교홍·김근태·이경숙·김부겸·이목희·박영선·신기남·김종률·김희선·정봉주·유기홍·이인영·안민석·최재천·이미경·선병렬·최재성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민병두·김교홍·김근태·이경숙·김부겸·이목희·박영선·신기남·선병렬·김희선·정봉주·유기홍·이인영·안민석·최재천·이미경·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민병두·김교홍·김근태·이경숙·김부겸·이목희·박영선·신기남·선병렬·김희선·정봉주·유기홍·이인영·안민석·최재천·이미경·최재성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5 이종걸·윤호중·박세환·최성·박상돈·김태년·변재일·양승조·이석현·이영호·김낙순·정청래 의원 발의)

2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송영선·유기준·서상기·주성영·박찬숙·김애실·권오을·김용갑·이규택·선병렬·최병국·이성구·김우남 의원 발의)

屋外廣告物등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한선교·김정훈·이계경·최성·박상돈·엄호성·박성범·장복심·권경석·안명옥·이영순·이혜훈·강기갑·최순영·노회찬·단병호·천영세·심상정·권영길·손봉숙·김애실·이경숙·현애자·김희선 의원 발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김충환·김정훈·김학원·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호성·이계경·이해봉·임태희·정화원·한선교·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양형일·강창일·염동연·강기정·원혜영·최규식·김동철·박기춘·노영민·서갑원 의원 발의)

1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이원영·김태년·박상돈·이계경·신기남·양승조·한광원·김영주·이시종·제종길·이은영·장영달·김재윤·백원우·김형주·고조흥 의원 발의)

1월 29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황진하·황우여·유승민·정갑윤·박상돈·임태희·이해봉·엄호성·김송자·박성범·김학송·고조흥·나경원·심재덕 의원 발의)

1월 2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이종걸·최인기·엄호성·신상진·최성·이해봉·김태년·노현송·이영호·고조흥·유재건·안상수·심재덕·이석현·변재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장경수·정성호·박상돈·류근찬·조경태·노영민·김동철·홍창선·윤호중·김재윤·최철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이종걸·최인기·엄호성·신상진·최성·이해봉·김태년·노현송·이영호·고조흥·이석현·변재일 의원 발의)

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김재윤·강창일·김우남·김재홍·김태홍·김희선·노웅래·노현송·서혜석·안민석·양승조·윤원호·윤호중·이광재·이계경·이미경·이상경·이은영·이인기·정두언·정청래·조배숙·지병문·최재천·황우여 의원 발의)

1월 3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최철국·최규성·노영민·이광재·강길부·조성래·이광철·이시종·이상열·서갑원·조정식·김형주·우상호·김태년·송영길·윤호중 의원 발의)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2007. 1. 26 최철국·최규성·노영민·이광재·강길부·조성래·이광철·이시종·이상열·서갑원·조정식·김형주·우상호·김태년·송영길·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7. 1. 29 이원영·김태년·박상돈·문학진·정성호·신기남·양승조·한광원·제종길·이은영·장영달·김재윤·백원우·김형주·고조흥 의원 발의)

1월 3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7. 1. 29 김애실·이계경·박상돈·이인기·박찬숙·박재완·이해봉·이한구·박형준·정희수 의원 발의)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7. 1. 30 정부 제출)

1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1. 30 정성호·박상돈·한병도·장경수·주승용·서재관·유필우·강길부·강창일·정장선·김태년 의원 발의)

1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07. 1. 30 강기정·김우남·김동철·김선미·양형일·홍미영·유기홍·최규식·윤호중·정봉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7. 1. 30 양승조·김재윤·유재건·박상돈·심재덕·한광원·이인기·노현송·이계경·변재일·이종걸·최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0 정부 제출)

1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 30 정부 제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진재해대책법안

(2007. 1. 30 정부 제출)

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商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정진섭·유승민·이인기·권경석·박재완·박형준·이상배·김애실·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교정공무원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정형근·이영호·이인기·황우여·박재완·고조흥·심재철·문희·임태희·공성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김정권·정진섭·유승민·안경률·김정훈·주성영·이인기·권경석·정희수·박형준·홍문표·이상배·김성조·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정진섭·유승민·이해봉·안경률·이인기·권경석·박재완·정희수·박형준·이상배·김성조·김애실·엄호성·김태환·윤건영·고조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김정권·정진섭·유승민·이해봉·안경률·김정훈·주성영·이인기·권경석·박재완·정희수·박형준·홍문표·이상배·김성조·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김정권·정진섭·유승민·이해봉·안경률·김정훈·주성영·이인기·권경석·박재완·정희수·박형준·홍문표·이상배·김성조·김애실·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정진섭·유승민·이인기·권경석·박재완·안상수·박형준·이상배·김애실·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정형근·이해봉·김학원·이영호·정병국·엄호성·이인기·고조흥·심재철·문희·임태희·공성진·박재완 의원 발의)
2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內水面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이상 2건 2007. 1. 31 정부 제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심재철·신상진·엄호성·황우여·김태년·이성구·김병호·최경환·임인배·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박영선·강기정·강창일·김낙순·김명자·김영주·김재윤·김형주·김현미·김희선·김효석·문희상·민병두·박기춘·박상돈·송영길·양승조·이경숙·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은영·이인영·이종걸·우윤근·유승희·윤원호·윤호중·장경수·장복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성호·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2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이한구·정진섭·유승민·이해봉·이인기·권경석·박재완·정희수·박형준·이상배·김성조·김애실·엄호성·김태환·고조흥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7. 1. 31 강길부·정갑윤·엄호성·김희선·박상돈·이미경·김낙순·최철국·노웅래·주승용·최병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정덕구) 사직의 건
(2007. 2. 1 정덕구 의원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7. 2. 1 임종인·강기정·강창일·김태홍·장영달·정청래·홍미영·노회찬·현애자·최재천 의원 발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7. 2. 1 심재철·고조흥·김기현·김명주·김학원·신상진·엄호성·이인기·이해봉·정문헌·정화원·차명진·최경환·최성 의원 발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7. 2. 2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노회찬·이영순 의원 외 8인 발의)

이상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룡 의원 대표발의)

(2007. 2. 1 김덕룡·김무성·김영선·박진·안명옥·안홍준·유기준·이원복·이해봉·이혜훈·정종복·정진섭·주성영·최구식·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강길부·유인태·노현송·정갑윤·주승용·박상돈·장향숙·김희선·정성호·조일현·서재관·박찬석·장복심·김영춘·강봉균·장영달·양형일·박기춘·김낙순·홍미영·조성래·김혁규·문학진·이미경·강창일·권경석·최규식·최연희·김정권·안경률·이상배·이인영·최용규·심재덕·변재일·김부겸·이진구·정두언·최인기·황우여·유기준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김기현·엄호성·김태년·이계경·고조흥·신상진·박재완·김명주·이경재·안상수·서재관·오제세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변재일·양승조·우제항·이종걸·이미경·양형일·우제창·염동연·서재관·민병두·노웅래·장복심 의원 발의)

생명자원관리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변재일·양승조·우제항·이종걸·이미경·양형일·우제창·염동연·서재관·민병두·서혜석·노웅래·장복심 의원 발의)

이상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최재천·최성·장영달·송영길·노현송·천정배·민병두·이목희·안민석·박영선·선병렬·손봉숙·임종인·김재윤·이상경·정청래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7. 2. 2. 최재천·최성·장영달·송영길·노현송·천정배·민병두·이목희·안민석·박영선·선병렬·손봉숙·임종인·김재윤·이상경·정청래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4건)

(2007. 2. 1 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으로부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자 2월 6일, 2월 7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

(2007. 2. 1 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으로부터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8일 본회의에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2007. 2. 1 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9일 본회의에 국무총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

(2007. 2. 1 장영달·김형오 의원 외 258인으로부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2일 본회의에 국무총리·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의안 철회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2007. 1. 23 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1월 2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의견서 제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2007. 2.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출)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뢰서 제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27대 위원 지명 의뢰

(2007. 1.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 제출)

1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대북 문제에 관한 질문서

(2007. 1. 10 이해봉 의원 제출)

군내 자살한 장병의 처우에 관한 질문서

(2007. 1. 11 장영달 의원 제출)

병역자원 장정들의 입영절차에 관한 질문서

(2007. 1. 16 박세환 의원 제출)

해군교육사령부에 관한 질문서

(2007. 1. 25 유재건 의원 제출)

성매매방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질문서

(2007. 1. 26 이주영 의원 제출)

용역보고서 자료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서

(2007. 1. 30 박명광 의원 제출)

주한 베트남인 실태에 관한 질문서

(2007. 1. 31 노웅래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방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1. 17 정부 제출)

군내 자살한 장병의 처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1. 22 정부 제출)

대북 문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1. 23 정부 제출)

해군교육사령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7. 2. 2 정부 제출)

(이상 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 1. 3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통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07. 2.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덕구 의원의 퇴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신명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